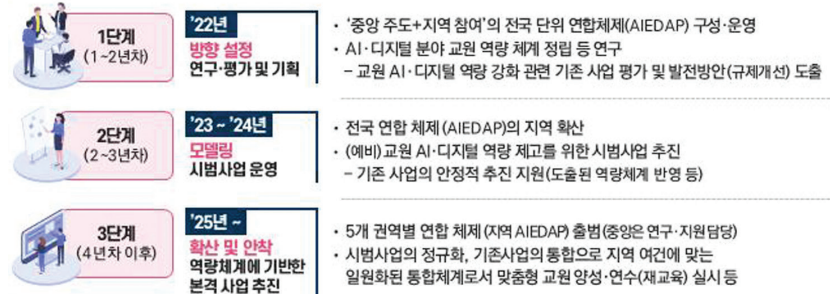


'컴퓨터 언어' 코딩, 초등학교부터 배운다... 2025년 적용

교육부 "다른 교과시간 줄지 않아... 지침 만들 것"
 고교는 학점제 맞춰 SW·AI 선택과목 확대 개설
 정보교사 확보... "교원수급 계획 따라 자원 활용"
 교원연수·보조교사·에듀테크 등 지원도 확대

AIEDAP 단계별 역할 로드맵 (안)



학년	현재	'22-'25	'25-
초·중학교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초등 5~6학년·17시간 중·34시간	AI 교육 선도 학교 확대	초·중학교 정보교과 필수 확대 초등: 34시간 이상/중: 68시간 이상 학교 자율 정보수업 중매 기제 마련
고등학교	SW·AI 선택과목 신설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방학 중(방과 후) SW·AI 캠프 운영 등 디지털 교육 활성화	공통교육과정 운영 확대 SW·AI 선택과목 확대
교원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도입 (석사학위)	현직교원 역량 강화 지원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정보교육 담당 교원 배치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 교육을 필수화해 디지털적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정보수업 최소 초 34시간 중 68시간... '코딩'은 필수

교육부는 22일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수업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은 한 학기 적어도 17시간, 중학생은 34시간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3년 뒤부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시수는 더 늘 수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정보교육 평균 시수는 초등학교 62.1시간, 중학교 52.8시간으로 모두 현행 의무 기준을 초과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변화를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 연내 확정·고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실제 시간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중·고등학생은 SW·AI 기초원리 이해 및 심화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습 내용이 강화된다.

초·중학생의 코딩교육도 정보 수업 내용에 담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최종 산출물로는 컴퓨터(언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현행 정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을 포함해 코딩 교육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코딩 수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중학생은 현상 문제 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것"이라며 "적절한 교수 학

습과 평가 등은 이달 말에 시행될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17주 기준인 한 학기 수업시수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16주로 재구조화되며 1주분의 자율시간이 발생한다"며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20%까지 허용되는 교과 확대편성 등을 활용해 정보교육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SW·AI 관련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이 같은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반발 속 사실상 철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범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 협의체를 운영해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와 릴레이식 현장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말씀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생각하고,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증원 통해 '교원 수', 연수로 '전문성' 확보할 것"

교원 수와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증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로 절반 아래다. 올해 임용돼 각 학교에 배치된 중등 정보교원은 17개 시도를 통틀어 178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약 500명씩 배출되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부터 부전공 획득 교사들(매년 40~80명)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 및 전문강사 등도 활용하되, 내년 발표될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정보교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범 팀장은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요가 2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양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밀한 교원 수급 체계에 따라서 향후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돼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초등 교사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중등교사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중등교사) 증원 방법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며 "사범대는 대학 총 정원과 결부돼 있어 협의의 중이고,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소외지역인 농어촌 초등학교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정보교육 역량을 지원한다. 디지털 튜터는 정보수업의 실기·실습활동을 돕는 보조강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34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강사채용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채용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은 교원 대상 AI교육을 설계·평가·분석하는 'AIEDAP'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기존 교원들은 AIEDAP과 연계해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비교사들도 최소한의 디지털 이해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교원자격증 확보를 위한 세부과목 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교사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 미래교육센터 28개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SW교육중심 대학으로 지정해 현직 및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과목... '교육수요 공교육이 품도록 최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부응해 에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AI 보조 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 및 수업 콘텐츠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선도학교,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SW·AI 캠프 등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디지털 교육강화가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오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계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지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센터'는 내년부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재능사다리'를 구축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오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